

농축산물 지켰다... 비관세 '우회 개방' 압력은 숙제

정부가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농업 분야는 '시장 추가 개방 차단'과 '비관세 협력 강화'라는 이중 축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특히 쌀·쇠고기 등 농업의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농업계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16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미 팩트시트를 통해 전략산업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쌀·쇠고기 등 농업 민감품목은 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포함하지 않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팩트시트는 길으로는 '동맹 강화'와 '관세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속으로는 농업을 어디까지 내줄 것인가를 둘러싼 긴 싸움이 치열했던 협상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협상팀도 미국이 여러 차례 농업 시장 개방을 압박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농업 분야 논의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민감품목의 시장 접근 확대 여부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팩트시트 내용과 관련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 일각에서 우려했던 통상 빅딜 속 '농업 희생 시나리오'는 일단 막아낸 모양새다.

농업 분야에서 시장 개방 대신 주목된 것은 'US 데스크' 설치다. 팩트시트 전문에는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달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협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뉴시스

한미 팩트시트 농업은 방어·비관세 협력 확대 정부 "쌀·쇠고기 등 민감품목 추가 개방 없다" 美 요구 대응 'US 데스크' 신설... 검역 지연 해소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8월 통상협상에서도 미국산 수입품의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US 데스크를 두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병해충 위험성 평가 등 검역 협상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제기해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소통 경로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할 창구로 US 데스크를 둔다. 소

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형태"라며 "US 데스크는 위원회 등 공식 협의 시 양국 간 연락 포인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팩트시트에는 농업 직접 개방보다 비관세 및 디지털 서비스 규범 협력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양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치정보·개인정보 이전, 디지털 유통 등에서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Equal Treatment)'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농식품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농산물 유

동이나 해외 수출 환경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향후 한-미 FTA 공동위원회 등에서 구체화될 비관세 규제 정비가 어떤 형태로 전개되느냐가 관건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담았다"며 "비관세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 협의를 미국 측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S 데스크 설치 및 비관세 규범 협력 등은 농업 수출입 체계의 정비·공조 단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향후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농업·식품 산업의 제도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뉴시스



김명수 광산구의회,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촉구 호남권 주민 이동 불편 및 여행업계 경영난 '심각'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회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및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국제공항 운영 중단으로 호남권 주민들과 지역 여행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무안공항은 호남의 유일한 국제공항으로, 지역 여행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생존이 위태로운 실정이며, 주민들은 국제선 이용을 위해 인천·김해·대구 등 타 지역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공사(3,160m)를 조속히 마무리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안공항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호남권 관광 인프라를 재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안공항 폐쇄 연장 조치에 만 머물지 말고, 재개항 시기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명확히 담은 로드맵을 발표해 달라"며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 없이 지역 균형 발전의 틀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무안공항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재개항 전까지 광주공항의 국제선 한시 운항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은 이날 가결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통령실, 국토교통부(공항공정책과),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의회,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이 대통령 "울산화력 붕괴사고 가슴 미어져... 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일터가 죽음의 현장 되는 비극 끝내야"... "전 사업장 실태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

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있어서는 안 될 사고"라며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매몰자 수습이 전날 완료됐다.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대통령실, 동북아 3국 공식 표기 '한중일'로 일원화 전 정부서 '한일중'·'한중일' 혼용... '한중일'로 표기 통일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을 지칭하는 공식 표기를 '한중일'로 일원화한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과 '한일중'이 혼재해 사용되던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한중일'로 공식 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한중일'이 일반적으로 쓰였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 '한일중'이 함께 사용되면서 국가 간 거리감이나 외교적 선호를 둘러싼 불필요한 해석과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표기 통일 방침은 이러한 논쟁을 정리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경우 APEC(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2025 장성군 방문의 해 Jangseong 백양사(쌍계루) 천년고찰 힐링 초대장